

# 북핵 '갑박' 총리 '면박' 부처 '반박' ... '취임 D-19' 급박해진 차

### 박 당선인 '내외환' 정치력 시험대 올라

### 취임 후 총리·장관 임명 '파행 출범'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2월 25일)을 앞두고 내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밖으로는 초입기에 들어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 정세를 초긴장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안으로는 새 정부의 틀을 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야당 등의 저항을 받고 있다.

더욱이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5일까지 새 정부 청와대 비서진과 총리 및 각료 인선에서도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내각 진용이 짜지기도 전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개문발차' 확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국정 과제 토론회도 설 이후로 미룬 채 인선에 집중하고 있으나 인선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이 같은 난관을 뚫고 집권 초기 국정을 안정제도에 진입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우선 박 당선인을 괴롭히는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일박 징후들이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시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태지만 자신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집권 초기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전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화정책으로 잘못 아는 사람도 있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화가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가 강경 쪽으로 선회한다면 '신뢰 프로세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근간이 될 정부조직개편안은 이해관계가 걸린 공직 사회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통상기능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 되자 외교통상부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강하게 맞받아며 원안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 같은 반발에 밀리면 결국 영(승)이 서지 않아 관료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특히 이 같은 반발을 정부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도 인수위와는 다른 입장이다. 원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입법 과정에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을 못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힘든 상황은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가 5일 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대체토론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물리적 마지노선인 4~5일까지 내각 인선은 물론 청와대 비서진 인선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도 높은 여론감속 속에 인사청문회 시작 전 자진사퇴한 '김용준 쇼크'로 인선 자체가 조잡스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 박 당선인은 지난 주말부터 공식 일정을 자제하며 인선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이같이 인선이 지연되면서 박 당선인의 첫 인사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법과 원칙대로 25일부터 새 정부를 가동시키지 못하고 야당과의 극한 대립으로 취임 후야야 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했던 역대 정부의 파행 출범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조직개편안 충돌 타부처 확산될까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의 충돌이 다른 부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영향권에 든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처로 꼽고 있다. 농업수산물부처와 행정안전부는 '자명'을 두고 내부적으로 반발이 크다.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작명을 놓고도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새누리당 경북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최고기 협상 등 통상 문제는 비전문부처가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기능의 이관 문제에 대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날 반발에 배기를 막는 발안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 태세에 들어갔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체인 '5+5' 10인 회동에 진행 인수위 부위원장이 새누리당 단장으로 참여했다.

국정기획조정분과 강석훈 인수위도 협의체 멤버로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도 국회로 나가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듣고 원안 고수를 위한 설득 작업을 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놓고 외교통상부와 인수위가 정면 충돌한 것과 관련, "박 당선인은 부처이기주의라고 무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주무 상임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총리 후보자 먼저 지명 뒤 靑 비서실장 인선

### 박 당선인 '관례대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우선 지명할 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애초 인수위 안팎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먼저 임명돼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관례'대로 총리 후보자를 먼저 지명하고 그 이후에 비서실장을 인선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측근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이 먼저 임명돼 검증을 주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비서실장이 인선돼야 검증이 되는 게 아니다. 검증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박 당선인은 자신의 프로세스(절차)대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서실장 인선→총리 후보 인선'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후보 검증을

지휘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지만, 김용준 전 후보자 낙마 이후 당선인 측에서 검증 강화 조치를 진행해온 만큼 불필요한 과정이라는 이야기다.

비서실의 한 인사도 "인사 검증은 이미 시스템으로 하는 상황에서 꼭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면서 "또 비서실장을 먼저 인선하면 비서실장이 총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것은 지금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취지라고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주 중 총리 후보가 먼저 발표되고 뒤를 이어 청와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선인 측은 정부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전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생각지도 않았던 흠결이 나오면서 인선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김진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총리 후보로 급부

상하는 분위기다. 김 준비위원장은 1998년 민선 2기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할 정도로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자기관리를 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출신인데다 재산이 많지않고 풍족대를 나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감점으로 꼽힌다.

비정인지 후보군으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과 조무제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안 전 대법관은 대선 당시 정치쇄신특위위원장으로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의지를 뒷받침한 인연 때문에 주목받는다. 마침 안 전 대법관이 선거 이후 미국에 체류하다 지난달 31일 귀국하면서 거취가 더 주목받기도 했다.

조 전 대법관은 '달걀밥이'라는 별명이 붙어주듯 청빈함이 가장 강점이다. 인수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박 당선인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친환경 다원 작살차

고품질 녹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1 T.222-2902.3973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 02)730-2983 ·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식품안전관리 061)281-1002

농림수산식품부